

학습 자료

— 대학생들을 위한 저작권 노트 —



15차시. 세계 속의 저작권법

1. 글로벌 시대. 외국에서도 저작권이 보호되나?

1)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물 보호

한류콘텐츠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엄청난 인기입니다. K-Pop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의 대표 문화상품인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품질의 콘텐츠 확산에 있어 저작권 보호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우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우리나라 노래, 우리나라 소설들도 외국에서 보호됩니다. 하지만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라야겠죠.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우리나라에서만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의회가 만든 일본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우리의 한류콘텐츠가 어떻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작권 관련 국제 협약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저작권 협약은 베른협약과 WTO/TRIPs 협정입니다. 이들은 모두 국제협약에 따라 회원국의 저작물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WTO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조약으로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것으로는 베른협약, TRIPs 협정, 세계저작권협약, 음반협약, WCT, WPPT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집행입니다. 중국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등도 모두 우리나라 저작물을 보호하는 법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단속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90년대까지 용산에 가서 컴퓨터를 조립하면 윈도우를 그냥 설치해주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 때 저작권법이 없어서 그런 일을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또 법적인 권리가 있어도 외국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도 안통하고 법도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우리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자들에게 해당 국가의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더불어 침해 단속 등 국가 간 공조를 위한 국제교류협력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 WTO 링크 :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

2) 외국인의 저작물

외국인의 저작물도 마음대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에 상응하게 보호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A국에서는 복제권 외에는 보호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중송신권 등 다양한 권리를 새로이 권리자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저작물은 A국에서 별로 보호를 못받는데, A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법에 따라 강력하게 보호받는 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지요.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우리나라에서의 보호를 제한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외국인의 저작물의 보호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 조약에 의한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상호주의에 관하여, 제4항에서는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 ①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 ②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국제 저작권법 질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저작권관련 중요 국제협약에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들 협약에서 약속한 바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153개 국가가 가입한(2010년 기준) WTO/TRIPs 에는 다음과 같은 국제법적인 한계도 존재합니다.

<3단계 검사법(3-Step Test)>

각국 국내법에 의한 저작권 제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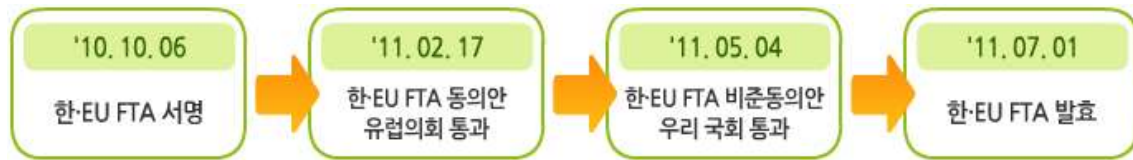
- ① 저작물 등의 통상적인 이용(normal exploitation)과 충돌하지 않고
- ② 저작권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 ③ 특별한 경우(certain special case)에 한정되어야 함

교육을 위해서는 모든 저작권을 제한한다거나, 공익 목적으로 저작권을 제한하는 조항같은 것들을 우리나라 국회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즉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약속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마음대로 저작권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관련하여 큰 국가 간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바로 그것입니다. FTA에서 약속한 내용은 그대로 국내법에 반영되어 지켜야 하는 것이 조약 당사국의 의무입니다.

1) 한-EU FTA



① 보호기간의 연장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EU FTA 관련 규정에 따라 발효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하기로 유예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한미 FTA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인데, 한미FTA가 아닌 한EU FTA를 통해 국내법에 도입되었습니다.

② 방송사업자의 공중재현권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입장료를 받고 방송을 보여주는 경우에 저작자외에 방송사업자에게도 허락을 받도록 한 조항입니다. 유럽에서는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지불하고 관람하는 예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례가 많지 않아서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더하여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를 도입하고, 종전 법에서 권리 침해 행위로 간주되고 있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및 무력화 예비행위를 금지행위로 옮겨 규정하였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추가적인 보호로 인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저해되지 않도록 암호 연구, 미성년 보호, 국가의 법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통제 기술 보호조치의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불법 복제물의 증가와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하여 접근통제 기술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에게 부여한 저작물 이용행위(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를 통제하기 위한 것(예 : CD 복제 방지장치)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에 접근하거나 그 저작물 자체를 향유(재생 및 작동)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것(예 : 복제는 할 수 있더라도 불법복제된 것은 작동을 할 수 없게 하는 장치)

④ OSP 면책요건을 구체화

기존 호스팅 서비스 중심으로 규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규정을 단순도판, 캐싱, 호스팅, 정보검색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로 면책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OSP 면책 요건을 인터넷접속서비스(단순도판), 캐싱서비스, 저장서비스, 정보검색도구서비스로 세분화하고, 각 서비스의 유형에 따른 면책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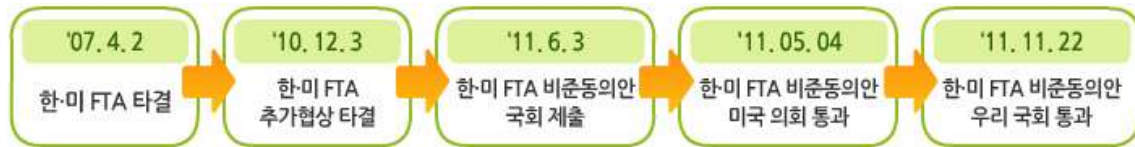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 라.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2) 한-미 FTA

한-미 FTA는 2007년 4월 타결되었는데, 비준동의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한-EU FTA 보다 늦게 국내법에 반영되었습니다. 시간을 끄는 사이 핵심적인

쟁점 사항이었던 보호기간 연장과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조문이 한-EU FTA를 통해 반영되었습니다. 한미 FTA에는 일시적 복제와 원활한 이용 측면에서의 공정 이용 일반 조항이 주목할 사항입니다.



① 일시적 복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균형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권리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또는 컴퓨터를 활용한 저작물 이용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항을 두고, 이제 인터넷 서핑만으로 잡혀간다는 우려도 들려오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인터넷 검색, 웹서핑 등은 일시적 복제의 예외인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현재와 같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에서 저작물을 송신받아 이용하거나 또는 컴퓨터 내의 저장매체나 그 밖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버퍼링(buffering)이나 캐싱(caching) 등을 포함하여 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필요한 범위 내의 일시적 복제가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일시적 복제를 인정한 것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며, 일시적 복제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일시적 복제를 이유로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이 제한되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② 공정 이용 일반 조항의 도입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포괄적 공정이용 제도를 도입하고, 그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도입한 것입니다.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상의 열거적인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으로서는 제한 규정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 하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모두 아우르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저작권

제한사유 이외에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을 신설하고, 특정한 이용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③ 위조 및 불법라벨의 유통, 영화 도촬 및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 금지행위를 규정함

구매자들은 일반적으로 음반이나 영화 DVD, 컴퓨터 프로그램 CD 등이 정품인지 여부를 그에 첨부되거나 동봉되어 있는 라벨이나 인증서 등으로 구별하므로 아래와 같은 라벨을 위조하여 유통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였습니다.



④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실손해 배상과 법정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손해배상 청구 요건으로 사전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권리자가 받는 실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등의 확보가 어려워 실손해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물당 1천만원이하, 영리목적으로 고의인 침해의 경우 5천만 원의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